

# ‘찌렁찌렁’ 유세 소음에 신음하는 유권자들

### 광주·전남 주요 지역 민원 잇따라...하루 수십 건 접수 주택가 등 집중...확성기 로고송 소음기준 비현실 지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선거 유세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일제히 고조되고 있다.

선거 유세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확성기 방송과 로고송이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1일 이후 광주 동구 충장동·금남로를 비롯해 서구 상무지구·화정동·풍암동, 남구 백운광장과 광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북구 용봉동·전남대학교 후문, 광산구 수안·첨단지구와 광주송정역 일대 등에서 후보자들의 유세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상

권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가가 밀집한 곳으로 출퇴근 시간마다 여러 후보 진영이 한곳에 모여 확성기 방송과 울동, 로고송을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전남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순천 연향동과 신대지구, 목포 하당신도심, 여수 웅천지구, 나주 혁신도시, 담양읍 사가지와 전통시장 등 주요 생활권을 중심으로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이 집중되면서 소음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음악과 고출력 방송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오전 7시만 되면 선거 음악 소리에 잠을 깨는 날이 많다”며 “왜 그렇게 큰 음량으로 동네 전체를 울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광주 서구선거위원회는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광산구 역시 하루 5건 안팎, 많게는 1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지역도 비슷하다. 담양에서는 하루 3~4건, 강진에서는 하루 5건 안팎의 소음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은 주로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와 오후 6~8시 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며, 아파트 단지과 원룸촌, 학원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빅데이터 민원분석시스템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민원은 총 5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확성기 관련 민원이 4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세 차량 관련 민원

도 199건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 규제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수준보다 장비 사용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 후보자의 차량 부착 확성장치를 정격출력 40킬로와트(kW), 음압수준 150데시벨(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 역시 3kW 이하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음압수준 150데시벨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라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경적은 약 110데시벨, 전동기 이착륙 소음은 약 120데시벨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선거 로고송에 대한 규제 부재다. 후보자가 사용하는 확성장치는 사전 승인과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가 있지만, 음악을 재생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에는 별도의 소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반복적인 음악 소음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위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현장 확인과 자율 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도 인정하고 있다.

선거위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하거나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음량 조절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만큼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유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을 호소하는 과정이 시민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선거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운동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권 보호 사이에서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맑음	05:19	달림	21:41
맑음	19:42	달림	06:14



광주	20~29	
목포	20~27	
여수	19~25	
순천	19~26	
구례	19~28	
광주	매남	19~27
진도	19~26	
진남	19~26	
진도	18~22	
진도	18~22	
진도	19~25	
진도	19~26	

목포	밀물(고)	03:28 / 15:08
	썰물(저)	08:44 / 20:27
여수	밀물(고)	09:53 / 22:36
	썰물(저)	04:11 / 15:50

## “피살 여고생 아닌 이체원으로 기억해주세요”

### 유가족 ‘가해자 장윤기’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 이체원양(사진)의 유가족이 고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유가족은 사건 현장 주변에 LED 가로등과 고화질 CCTV, 안심 비상벨 설치 등을 확대하고

광주전남추모연대와 이체원양 유가족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채원이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던 아이였다”며 “더 이상 ‘첨단 여고생’이 아닌 ‘이체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했다. 이들은 “장윤기는 단 한 점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사법부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 범시민 엄벌 촉구 탄원 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한 심리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가족은 “채원이의 친구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도 요

구했다. 유가족은 사건 현장 주변에 LED 가로등과 고화질 CCTV, 안심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고 하고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원이의 희생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유가족 함께 오는 22일 이상의 49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체원양은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시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행과 스토킹 관련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장윤기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 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실패하자 불특정 상대로 분풀이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장미 향기 속으로 1일 오후 전남 곡성군 심진간지치마을 곡성세계장미축제장을 찾은 이들이객들이 수천만 송이의 형형색색의 장미꽃 사이를 거닐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5명 사망·2명 중경상

### 56동 세척공실 화약 세척 중 폭발 추정...2시간 만에 완진 2018년·2019년에도 폭발사고로 각각 사망 5명·3명 발생

1일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최초 신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 동시간대 119 신고가 30여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께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10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하고, 오후 1시 7분께 불을 완전히 끄고 있다.

이 불로 지상 1층 544㎡ 면적의 건물 1동이 모두 불에 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폭발은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화약 관련 세척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유성소방서·유성구보건소는 오후 1시께 사고가 난 대전시업장 정문 앞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근무 인원 7명 중 사망자 5명은 모두 폭발한 작업장 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2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구조됐다. 이들 중 전신화상 중상자는 입원 치료 중이며, 경상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국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는 과거에도 두 번의 폭발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8년 5월 폭발 사고가 나면서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심한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에도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 ‘독극물 피의자 사망’ 경찰 호송 규칙 미준수

### 경찰관 3명 ‘주의’ 처분

경찰서에 연행된 피의자가 청산염(정산가리)을 복용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피의자 호송·유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특수협박 혐의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호송된 20대 여성 A씨는 피의자 자택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로 확인됐다. 체내와 소지한 물품에서는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

사건 이후 진행된 경찰 감찰에서는 당시 임무를 담당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관련 규정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의 가방 등 소지품은 확인했지만, 함께 소지하고 있던 여러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약품이 독극물인지 여부를 육안만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대신 주의 등 인사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물질이 치료용 약품인지 독극물인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신병 관리 과정에서 소지품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과 현장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월단체 “스타벅스 미국 본사 즉각 개입을”

### ‘탱크데이’ 논란 관련 진상조사·사과·재발방지책 촉구

오월단체가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국내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항의와 대응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 항의와 대응 촉구 서한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메일에는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던 군부 독재의 학살수단인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을 감행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유가족,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심각한 역사 모욕 행위이자 반인권적 처사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스타벅스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I)과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내 라이선스 및 운영권을 가진 이마트(신세계그룹) 측의 이러한 몰역사적 행태는 스타벅스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미국 본사 측에 경영진의 즉각적인 개입과 철저한 진상조사, 강력한 제재 조치·책임 추궁,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이벤트’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시민사회단체는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 직후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오너인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불매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지인 집에서 금고 절도

만년필 ○-지인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6000만원이 든 금고와 통째로 들고 달아난 40대 일당이 경찰에 체포

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특수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

이들은 지난 3월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현금 6000만원이 담긴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아

A씨 일당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법 B씨로부터 집 안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과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

실행에 나선 A씨 일당은 금고를 아파트 밖으로 옮긴 뒤 다른 장소에서 금고를 파손해 내부에 있던 현금을 꺼내 나눠 가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서울 등에서 피의자 3명을 차례로 검거, 송태영 기자 sty1235@

##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배달대행업체 대표와 소속 기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구속하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기사 등 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2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6000만원을 가로챘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사건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계획했으며, 실제 피해 규모보다 과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대표 A씨의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자신 운영하던 광주의 한 음식점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추가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나서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